

野 “따질건 따지자”... 정부조직개편에 ‘태클’

‘통상’ 이관 정면 충돌

법안처리 적극 협력 하되
과도한 권한집중 수정 요구
여야 6인 협의체 힘겨루기



서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협의체 제1차 회의가 열린 4일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시작에 앞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강석훈 의원. /연합뉴스

4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일단,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산업 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 분리 ▲중소기업청

부에 산하협력 기능을 놔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협력의 기획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 분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중소상공부) 격상 ▲우정사업본부→우정청 격상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개편 및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과 민주당 합당은 이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동을 가졌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6인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부대표는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이 ‘여야 6인 협의체’에 포함될 때 대해 “법안을 낸 인수위는 주체고, 주체가 낸 법안에 따라 여야

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진 정책위의장은 “나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카운터 파트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고 강 의원은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일 2차 회담부터는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간사 의원까지 포함한 ‘5+5’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교부 정부조직개편안 반발... 인수위 “부처 이기주의”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4일 정면 충돌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통상기능 이전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외교통상부는 그동안에도 여러 루트로 반대를 표시해 왔다.

김 장관은 이날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또 “외교부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이 통상교섭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같은 외교부의 강한 입장 표명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전제,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하나의 궤이며 부처 이기주의”라며 정면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66조와 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외교통상부는 그동안에도 여러 루트로 반대를 표시해 왔다.”

그는 또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가 무서워...”

총리·靑 인선 지연... 새정부 출범 ‘진통’ 검증강화에 “살아남을 사람 없다” 고사

총리 설 이후 발표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인사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 측 인사들에 따르면 4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선이 관측됐지만 발표는 없었다. 인수위 주변에서도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후임 총리 및 조카 인선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지휘할 가능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하마평이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발표가 늦어지는 점을 볼 때 박 당선인이 청와대 입성시 국회 상정된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총리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대상 후보자들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린 한 관계자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의 인사를 검증했

데 대부분 결격 사유가 드러나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언론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고위급 인사들도 막상 들여다보면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특정업무경비 전용, 부동산 다룬 계약서 등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면 살아남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또 총리후보군이 경우 청문회를 두려워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인선 지연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동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감안해 이

런저리 이유로 후보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은 20일 간이다. 따라서 총리와 각료들에 대한 충분한 인사청문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물리고 있다.

그럼에도,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일정보다는 충실한 검증을 통한 후보 선정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인선 실패는 집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의 급격한 약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런 측면에서 설 연휴 이후 후임 총리 후보 발표설도 제기된다. ‘좋은 후보’만 지명하기만 한다면 설 연휴 직후인 12일 후보를 지명한 뒤 그 다음 날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하면 10일 내로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계산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5년 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도 장관 명단 발표는 2월18일 있었던 점을 보면 지금 인선 과정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빛의만평

- 김중두

기막히게 숨기도 잘 숨는군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29,000~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69,000~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55,00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아름다운 해변을 주는 동백연의 **카멜리아힐** - 천지연폭포 - 석부재미공원 **중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우동구이)** - **화순꽃지왕 생태탐방숲길 트레킹** - (선택관광)신방산유람선 미니여객비행관 소인국테마파크 & 옛날엔적에 - **더마파크 공연 or 제주서커스월드**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탈라엔(토산품점소매) - 삼나무술길** 경유 (선택관광)매지아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매직티아거소 - **꽃지왕 테마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 **조랑말승마체험 - 중식(토종돼지고기+숙전+출발막걸리)** 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임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선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해녀촌 - 농수산물** 쇼핑 제주공항 도착 후 **티켓팅** - 제주공항 도착

*항공기간 : 2012.09.01 ~ 2013.02.28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특급호텔과 함께 겨울 특가여행!! **2박3일**

*항공시간 - OZ8147 19:20분 광주출발 / OZ8148 19:20분 제주출발 기준

신라호텔 (~2월14일) + 2박2조식 포함, K5 또는 동급 54시간 기준(산타 주중적용 : 앞~수 출발)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95,000원~ 주말 644,000원**

해비치리조트&호텔 (~2월21일) + 2박2조식 포함, K5 또는 동급 54시간 기준 (구정연휴기간 별도 문의)

◆해비치리조트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15,000원~ 주말 569,000원**

◆해비치호텔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40,000원~ 주말 599,000원**

** 편의시설중... 놀이기구 이용가능 무료 이용 가능

제주도골프투어 -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유류세 별도) / 33시간+비즈니스호텔2박2일 or 골프 18홀 + 18홀 그린피

■ 골프장 : 카트비 / 캐디비 / 전일정 식대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오!

(4인이상 1조 출발)

[명품2회] 테디벨라+블랙스톤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405,000~	[명품2회] 테디벨라+세인트모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테디벨라+우리들CC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명품2회] 라온+블랙스톤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413,000~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우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 침탄/투어디자인 974-3050 |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 고고투어 603-4416

담당: 공지혜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제주 T.1600-4800 | 서울 T.02-6404-4708 | 부산 T.051-469-7030 | 대구 T.053-425-0747